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반대건의안

의안 번호	222
----------	-----

제출년월일 : 2001. 6.

제 출 자 : 이종원의원의외인

1.주 문

최근 수도권 일부의원들의 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는 스스로 개정논의를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 제정을 건의함

※ 건의문(안) : 따로붙임

2.제안이유

가. 첨단.문화산업의 공장총량제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유명무실화 시키는 개정안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산단 및 농공단지의 신규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업체들마저 수도권으로 역유출됨에 따라 지방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것임

3.참고사항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1부.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철회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25명)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국민의 국회가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이어 수도권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당혹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첨단산업·문화산업 관련업종 및 공장 집단지 등을 공장총량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연보존권역의 세분화를 통한 개발, 공장총량 규제를 적용하는 공장의 최소면적을 500㎡로 상향하여 규제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이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지방의 공동화 현상만 심화시켰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수도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된다면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6%의 인구, 55%의 제조업체, 82%의 정부 및 공공기관, 95%의 대기업 본사가 밀집된 수도권에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일관성을 잃게되고 지방산업기반 붕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논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수도권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지역 균형발전의 본질이 훼손된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만섭 국회의장님께서서는 금년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원칙과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국회를 지켜나갈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회 만이라도 꿋꿋하게 서 있으면서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편협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사는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21C 첫 20년의 국토 청사진으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지방 중심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개념의 국토관리 기법과 제고를

제시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공적 실천을 담보하고 있는 핵심적 골격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국민 모두의 밝은 미래를 담고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국회 스스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논의를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제정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충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